

폐쇄된 광주 인화학교에 장애인 수련시설 들어선다

371억 들여 장애인 숙박·체험시설, 인권기념관, 공원 등 조성

양산동 옛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건립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 폐쇄된 광주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수련 시설이 들어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산구 삼도동 옛 인

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수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 371억원(국비 185억·시비 186억원)을 투입, 1만8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한다.

건물에는 장애인 숙박·체험·관리 시설과 함께 인권기념관, 힐링 숲, 운동장, 공원 등이 들어선

다. 시는 2011년 인화학교가 문을 닫자 부지를 장애인 교육·재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국비 확보, 안전 진단 등을 거쳐 현재 건축 설계 중이다.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문을 열 예정이다.

인화학교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도 건립된다.

북구 양산동 옛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어교육실, 언어치료실, 청력 검사실, 직업재활실, 인권 상담실, 보호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한다.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근로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설계 작업에 들어가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다.

1988년 건립돼 시설이 노후한 장애인종합복지관(광주 북구 동림동)은 299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문제에 의미를 가진 인화학교 활용 방안을 고심했다"며 "장애인 수련 시설과 복지관을 만들어 1만명에 달하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동찬 의원 주관으로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디지털·비대면시대 '도정발전 아이디어' 전남도, 27일까지 공모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비대면 시대 도정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다 줄 '2020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 등 빨라진 미래를 준비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주제는 ▲비대면 시대 도민소통과 행정서비스 개선 제안 ▲도민의 삶에 만족감을 드높일 수 있는 제안 ▲재난극복 체계적 대응 등이며, 도정 전 분야의 활력과 도약을 위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모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한 국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또는 포털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11월 중 서면심사 후 12월 중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지며,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1명 100만원, 동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이내 각 3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광주 변전소 부지 사들여 공원 조성해야"

임미란 광주시의원 주장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14일 "남광주 변전소 부지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0년간 고압선 송전탑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에게 변전소 부지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안전과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남광주 변전소는 1970년대 남구 진월동에 2만5천700여㎡ 규모로 설치됐다가 2013년 12월 철거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최고 공기압인 환전이 재정 건전화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개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주민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며 "광주

시는 이곳뿐 아니라 다양한 부지를 찾아내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27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교육청 현안에 시정 질문을 하고 조례안 33건, 동의안 43건, 보고안 9건, 건의안 1건 등 안건 86건을 처리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산·양육, 인공지능 산업 육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복 착용 장려 등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의원 8명은 19~21일 광주시, 22일에는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한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14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새로 등록된 전국의 사회복지서비스원(인천·대전·세종·강원·충남) 중 첫 번째로 문을 여는 광주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어린이집 4곳을 포함해 14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약 300명의 종사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운영하고 연내에 서구와 북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원 중 처음으로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앞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법인 설립이 완료된 지난 7월부터 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돌봄 종사자가 더 나은 여건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개원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해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로 시작된 국가사업이다"면서 "시는 사회복지서비스원 개원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도교육청, 전국 첫 '고교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5만3000명에 1인당 15만원씩 지급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15일까지 고등학교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두 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남도의회와도 협력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발빠르게 추진해 지난 13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원금을 15일까지 신

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은 총 79억원 규모이며, 도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등 5만3000여명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 스포츠클럽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전국 최초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한 고교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 교육재난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